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24일 제주도 외도동 일대 한 밭에서 농민들이 브로콜리 식재작업으로 한창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시 화북동 미세먼지 관리구역 지정

화북공단 등 취약시설 밀집도,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지능형 공기세척기 등 설치실효있는 저감방안 마련키로

제주시 화북동 지역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시 화북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상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화북동 일대가 우선 지정된 이유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 총 취약시설 28곳이 밀집해 있는 데다 화북공업지대와 인접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도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지능형 공기세척기(스마트 에어샤워실) 등 주민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비롯,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한 상시 측정,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0-24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호 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헌법소원 기각

헌재, 어제 결정... 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제도 유지
 제주참여연대 2018년 교육자치·자주성 훼손 주장 제기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앞두고 논란 계속될지 촉각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면서 수년째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조항(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내에서는 교육의원 제도의

피선거권 제한 논란과 함께 존폐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018년 4월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을 심리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인 사람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조항이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요청하면서 의회는 상임위원회, 의원별, 교섭단체별 물밑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난 2006년 제

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입된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치러졌지만 전국 일몰 규정으로 2014년 폐지됐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고도의 교육자치권 보장과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란 특유의 교육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도 피선거권 제한과 '깜깜이·묻지마 투표' 지적, 무투표 당선 문제 등을 안고 수년째 '존폐 논란'이 반복돼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지하수 선제적 수질관리 나선다

내년 1월까지 과제발굴 용역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본격

제주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5일까지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현재 운영 중인 지하수 수질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주의 수자원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수질관리제도 정비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환경분야 국제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O)이 수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생활용수의 99.7%, 농업용수의 96.6%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 주 함양지역

인 중산간지역의 액비 과다 살포, 타 지역 대비 비료사용량 과다 등으로 일부 지역의 지하수인 경우 질산성 질소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하수가 주 수원인 지역현실을 감안해 수질목표관리, 수질오염 지역 중점 관리, 체계적 오염원 관리 등 선제적 수질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국내·외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 및 적용 사례를 통한 시사점, 지하수 오염취약지구 및 집중관리지역, 제주형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개선(안) 및 정책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축산·하수 등 오염원 관련 부서 등과 연관된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련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하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비료·하수 등 부서별 오염원 관리 강화, 수질 모니터링 강화, 수질개선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액 70억원

복구비로 149억원 국고지원
 애월읍은 전기요금 등 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영향으로 도내에서는 약 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유시설은 주택 41건, 농경지 유실 2.4ha, 농작물 7695ha, 산림작물 464ha, 농림시설 10.7ha, 수산 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 43건 등 2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및 하천시설 유실·파손 등 총 137건·4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지역 피해액은 국고지원 기준액 36억원을 상회한 규모다.

제주도는 태풍피해 복구비로 사유시설은 121억원, 공공시설 28억

원 등 총 149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사유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자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애월읍은 읍면동 피해 기준액인 9억원을 상회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2억원)이 이뤄진다.

또 애월읍 지역의 경우 주택과 농·어업 등 주요 생계수단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된다.

이태윤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0 추석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을 추석은 가족, 친지, 공동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만은 가까이 하는
 모두가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 청정 제주, 안전 제주를 위해
집안행사·동창·동문·향우회 등 친목 모임 자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외출 자제
 - 2**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3**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5** 창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6** 실내·실외(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
- Jeju 제주특별자치도**